

〈2010년 국정감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질의서〉

‘의료쇼핑, 약물남용’ 국고낭비 전혀 개선 되지 않아

1. 현황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2조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로부터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업무를 위탁받아 진료 및 지원을 하고 있음.
- 공단 산하 5개 보훈병원과 305개(2010.8월 현재)의 민간위탁병원에서 보훈대상자에게 의료행위 실시 후 진료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 또는 감면해주고 있음.
→ 보훈병원의 시설과 인력이 부족하여 위탁병원제도를 통해 다른 병원에 진료를 의뢰하고 있음.

〈지역별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체결 현황〉

(기준:2010.8월 현재)

관할 병원	서울병원	부산병원	광주병원	대구병원	대전병원	합계
위탁병원 수	118	50	62	33	42	305

자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답변자료

- 보훈대상자의 고령화로 인해 보훈병원 이용자 수는 매년 증가, 국가부담금도 늘어나고 있음.

- 2010년 현재 전체 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 보훈대상자의 비율은 68.5% 수준이며 (전체 796,425명 중 545,551명)
- 2010년 현재 보훈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1.2세임.

〈보훈보상대상자의 평균연령 및 65세 이상 비율〉

(기준: 2010. 8.31. 현재)

구분	평균연령	65세 이상 비율
전체 보훈대상자	71.2세	68.5%

- 병원이용자는 2006년 158,917명→ 2007년 168,367명→2008년 179,623명→2009년 192,725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임.
- 진료비 국가부담금은 2009년 4,207억 5,100만원이며 2010년 7월 현재 2,439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증가 추세임.

〈최근 5년간 보훈 병원 이용자, 국가부담금 증감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기준:2010.7월 현재)

구분 \ 년도	2006	2007	2008	2009	2010.7
병원이용자	158,917	168,367	179,623	192,725	172,021
국가부담금	344,168	376,772	389,754	420,751	243,966

자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답변자료

2. 문제점

- 2009년 국정감사에서 『보훈대상자의 의료쇼핑·약물 오남용 심각』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음. 그러나 여전히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009년 국정감사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 진료인원 145,184명 중 진료일수가 365일 초과 환자는

→ 전체 진료인원의 44.2% (64,111명), 연간진료비의 71.2% (2,638억1,400만원) 차지

■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 진료내용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관리할 것

■ 위탁병원 이용자들의 약물남용으로 인해 약제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중복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일부 병원이용자의 중복진료 및 중복투약으로 국가부담금 낭비, 의료지원 편중, 지원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는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실시했다고 답변함.

(조치사항)

- 위탁병원 및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해 특별 관리 기준을 마련 관리대상자를 선정하고 서한문 발송, 상담 등 관리감독 강화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힘.(2009년 6월)
- 하지만 의료이용실태에 대한 분석은 위탁병원으로부터 자료를 수집, 일괄 취합하는데 머물고 있으며 분석은 최소 2개월이 소요되는 등 사전예방보다는 사후관리에 머물고 있음.

<관리대상자 선정기준>

구분		선정기준	대상
위탁병원		· 진료비 상위병원 선정 -현재 위탁병원 수 306개소	39개소
이용자	집중관리	· 의료이용실태 선정항목별 상위 100위 이내 -선정항목: 외래일수, 투약일수 진료비, 원외약제비	80명
	관찰관리	· 관찰대상: 집중관리대상 외 상한일수 초과대상자	189명

자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답변자료

- 중복진료 및 중복투약의 관리수준이 사후관리에만 머물러 있어 2009년 국정감사 이후에도 중복진료 및 약품 남용 사례가 계속 발생, 국가부담금 등 예산낭비를 반복해서 초래하고 있음.
- 2009년 투약일수 상위 1,2위에 대해 한국복지의료공단의 받은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분석자료 첨부)

<2009년 중복진료 및 의약품 남용사례>

사 례	내용
1위. 송OO	-병명: 상세불명의 만성위염, 후두염 -총진료비: 24,203,657 -진료일수: 5,248 -투약일수: 4,562 ※ 특정약품에 대해 2년 6개월 가량 중복진료 및 중복투약
2위. 양OO	-병명: 만성 폐쇄성 폐질환 -총진료비: 17,341,520 -진료일수: 4,827 -투약일수: 4,519 ※ 2개 의료기관을 평균 10일 간격으로 내원하여 중복진료 및 중복투약

※자료:2009년 투약일수 상위 1,2위에 대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자료를 통해 분석

※분석자료 첨부

- 2009년 병원 전체 이용자의 평균 진료일수는 456일, 평균 진료 비용은 271만원으로 일부 과다이용자의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총진료일수, 총진료비 비교>

	총진료일수	총진료비	비고
1위 송OO	5,248	24,203,657	※ 일부 병원 과다 이용자에게 의료지원 편중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
2위 양OO	4,827	17,341,520	
2009년 병원이용자 평균	456	2,710,000	

- 사후관리가 잘되는 지 살펴보기 위해 2009년 집중관리대상자로 선정된 투약일수 상위 1인의 2010년 1월~6월 기간 동안의 중복투약 현황을 보니 여전히 중복투약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6개월 간 특정약품에 대한 총 투약일수는 274일로 나타나고 있음.

→ 6개월 간 214일 초과 약품비는 300만원 가량임.

- ※ 집중관리대상자에 대해 서한문 발송, 상담 등을 통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움.

<2009년 투약일수 상위 1위(송OO) 중복투약 현황>

(단위 : 일/천원)

동일 주성분	효능분류	약품명	총투약 일수	총약품비	214일 초과일수	214일 초과약품비
123804A CH	진해거담제	뮤코론375mg캡셀	274	13,974	60	3,060

※ 2010.1월~6월 진료일수를 214일 초과일수로 중복일수로 산정

※ 214 초과 약품금액=(총약품비/총투약일수)*214일 초과 투약일수

→ 현재 보훈병원과 보훈병원 간 그리고 다른 요양기관 간 의약품 사전점검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2009년 진료인원 148,999명 중 연간 진료일수 365일 초과 환자는 전체 진료인원의 49.9%(74,495명)이며 연간진료비의 73%(294억 2400만원)를 차지하고 있음.

→ 지난 국정감사와 비교하면 오히려 과잉진료비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음.

<2008년 · 2009년 진료인원, 진료비용, 진료일수 비교>

(단위: 명/백만원/천원)

	365일 초과 진료 인원		365 초과 진료비용		365 초과진료일수	
2008년 기준 (국정감사)	64,111 (44.2%)	5%	263,814 (71.2%)	2%	47,348 (81.2%)	2%
2009	74,495 (49.9%)	증가	294,824 (73%)	증가	56,739 (83%)	증가

<2009년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의료이용 조사결과>

(단위: 명/백만원/천원)

진료일수	인원		총진료비		총진료일수	
365일 이하	74,504	74,504	108,987	108,987	11,333	11,333
366~1,000	58,385	74,495 (49.9%)	197,998	294,824 (73%)	34,098	56,739 (83%)
1,001~2,000	14,815		84,971		19,477	
2,001~3,000	1,150		9,924		2,661	
3,001~4,000	125		1,614		417	
4,001~5,000	19		293		81	
5,001이상	1		24		5	
계	148,999		403,810		68,072	

분석기준:진료일수=입원일수+외래일수+투약일수

총진료비=보훈병원총진료비, 위탁병원국가부담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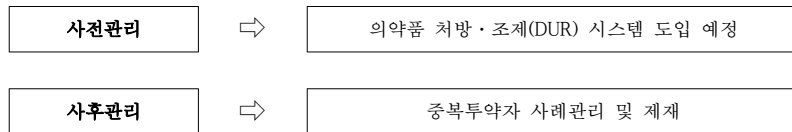
3. 개선사항 요구

<2009년 국정감사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답변내용>

- 보훈병원과 위탁병원간, 위탁병원과 위탁병원간 중복처방 실시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음.
- 보건복지부의 DUR시스템 시범사업을 보고 내년 말 도입할 예정임.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는 중복진료 및 중복투약 방지를 위해 관리시스템을 마련 실시하고 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약품 오·남용자 관리 시스템 >



- 사전관리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처방·조제 확인(DUR)시스템’의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도입 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함.
→ 그러나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의약품 처방·조제 확인(DUR)시스템’과 관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별도의 논의·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답변함. (2010.10.1 서면답변)
- DUR시스템은 현재 시범사업 운영 중으로 2010년 12월 전국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 DUR시스템 도입을 우려하는 의사협회 등의 의견조율, 시범사업 중 발견된 시스템상의 문제 (개인정보유출, 환자의 대

기시간 증대) 등 시스템 도입이 성급하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음.

☞ (질의요지) 공단은 약품 오·남용자의 사전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평계만 대고 있는 사이 국민의 혈세가 세고 있는 상황임. 전년도 지적한 내용에 비해 전혀 개선된 사항이 보이지 않음. 보훈병원 과다이용자에 대한 집중관리 및 적정진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과 계획을 밝혀달라.

[분석자료 첨부]

- 투약일수 상위 1위(송OO)의 특정약품 중복투여 현황을 보면
- 총 투약일수는 **900**일로 무려 2년 6개월 가량의 약품을 투약 받는 것으로 나타남. 부산,대구,서울,대전 보훈병원 등에서 내과진료와 함께 이 처방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투약일수 상위 1위인 보훈대상자의 특정약품 중복투약 현황>

(단위:일,원)

연번	병원명	진료과	진료일	처방명	일일 투약량	일수	금액
1	부산 보훈병원	내과	20090112	지아이지정150mg/ (부광)	2	30	300
	대구 보훈병원	내과	20090114	지아이지정150mg (부광)	2	30	300
	서울 보훈병원	내과	20090203	지아이지정(부광)	2	90	900
	서울 보훈병원	내과/신장	20090310	지아이지정(부광)	2	63	630
	서울 보훈병원	내과/소화기	20090410	지아이지정(부광)	2	60	600
	서울 보훈병원	내과	20090414	지아이지정(부광)	2	60	600
	서울 보훈병원	내과/소화기	20090429	지아이지정(부광)	2	90	900
	대전 보훈병원	정형외과	20090616	지아이지정 150mg/Tab부광	2	28	224
	서울 보훈병원	내과/소화기	20090714	지아이지정(부광)	2	90	720
	서울보훈병원	내과/소화기	20090727	지아이지정(부광)	2	90	720
	대전 보훈병원	정형외과	20090824	지아이지정 150mg/Tab부광	2	28	224
	서울 보훈병원	내과/소화기	20091005	지아이지정(부광)	2	90	540
	서울 보훈병원	내과/소화기	20091110	지아이지정(부광)	2	60	360
	서울 보훈병원	내과	20091209	지아이지정(부광)	2	90	180
	서울 보훈병원	응급의학과	20091213	지아이지정(부광)	2	1	2
	총계					900	7,400

- 투약일수 상위 2위(양OO)의 특정약품 중복투여 현황을 보면
- 총 투약일수는 684일로 거의 2년 치의 약을 투여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상병원과 세명병원을 주기적으로 다니며 신경과, 내과 진료와 함께 처방을 받고 있음.
 - 동일일자에 중복진료 및 중복투약을 받고 있음.

<투약일수 상위 2위인 보훈대상자의 특정약품 중복투약 현황>

(단위:일,원)

연번	병원명	진료과	진료일	처방명	일일 투약량	일수	금액
2	경상병원	신경과	20090102	그리아연질캡슐/A	3	10	23,400
	경상병원	신경과	20090102	그리아연질캡슐/A	3	10	23,400
	세명병원	내과	20090103	글리아티린연질캡슐/A	3	7	20,475
	세명병원	내과	20090103	글리아티린연질캡슐/A	3	7	20,475
	세명병원	내과	20090103	글리아티린연질캡슐/A	3	7	20,475
	세명병원	내과	20090103	글리아티린연질캡슐/A	3	7	20,475
	세명병원	내과	20090103	글리아티린연질캡슐/A	3	7	20,475
	세명병원	내과	20090103	글리아티린연질캡슐/A	3	7	20,475
	세명병원	내과	20090203	글리아티린연질캡슐/A	3	7	20,454
	세명병원	내과	20090203	글리아티린연질캡슐/A	3	7	20,454
	세명병원	내과	20090203	글리아티린연질캡슐/A	3	7	20,454
	세명병원	내과	20090203	글리아티린연질캡슐/A	3	7	20,454
	세명병원	내과	20090203	글리아티린연질캡슐/A	3	7	20,454
	경상병원	신경과	20090212	그리아연질캡슐/A	3	10	23,400
	경상병원	신경과	20090221	그리아연질캡슐/A	3	10	23,400
	세명병원	내과	20090302	글리아티린연질캡슐/A	3	7	20,454
	세명병원	내과	20090302	글리아티린연질캡슐/A	3	7	20,454
	세명병원	내과	20090302	글리아티린연질캡슐/A	3	7	20,454
	세명병원	내과	20090302	글리아티린연질캡슐/A	3	7	20,454
	세명병원	내과	20090302	글리아티린연질캡슐/A	3	7	20,454
	경상병원	신경과	20090304	그리아연질캡슐/A	3	15	35,100
	경상병원	신경과	20090304	그리아연질캡슐/A	3	10	23,400
	경상병원	신경과	20090304	그리아연질캡슐/A	3	10	23,400
	세명병원	내과	20090401	글리아티린연질캡슐/A	3	7	20,454
	세명병원	내과	20090401	글리아티린연질캡슐/A	3	7	20,454
	세명병원	내과	20090401	글리아티린연질캡슐/A	3	7	20,454
	세명병원	내과	20090401	글리아티린연질캡슐/A	3	7	20,454

	세명병원	내과	20090401	클리아티린연질캡셀/A	3	7	20,454
	경상병원	신경과	20090404	그리아연질캡셀/A	3	15	35,100
	경상병원	신경과	20090404	그리아연질캡셀/A	3	15	35,100
	세명병원	내과	20090501	클리아티린연질캡셀/A	3	7	20,454
	세명병원	내과	20090501	클리아티린연질캡셀/A	3	7	20,454
	세명병원	내과	20090501	클리아티린연질캡셀/A	3	7	20,454
	세명병원	내과	20090501	클리아티린연질캡셀/A	3	7	20,454
	세명병원	내과	20090501	클리아티린연질캡셀/A	3	7	20,454
	세명병원	내과	20090501	클리아티린연질캡셀/A	3	7	20,454
	경상병원	신경과	20090504	그리아연질캡셀/A	3	20	46,800
	경상병원	신경과	20090504	그리아연질캡셀/A	3	15	35,100
	세명병원	내과	20090601	클리아티린연질캡셀/A	3	7	20,454
	세명병원	내과	20090601	클리아티린연질캡셀/A	3	7	20,454
	세명병원	내과	20090601	클리아티린연질캡셀/A	3	7	20,454
	세명병원	내과	20090601	클리아티린연질캡셀/A	3	7	20,454
	경상병원	신경과	20090605	그리아연질캡셀/A	3	30	70,200
	경상병원	신경과	20090605	그리아연질캡셀/A	3	20	46,800
	세명병원	이비인후과	20090702	그리아티린연질캡셀/A	3	7	20,454
	경상병원	신경과	20090724	그리아연질캡셀/A	3	30	70,200
	세명병원	내과	20090803	클리아티린연질캡셀/A	3	7	20,454
	세명병원	내과	20090803	클리아티린연질캡셀/A	3	7	20,454
	세명병원	내과	20090803	클리아티린연질캡셀/A	3	7	20,454
	경상병원	신경과	20090822	그리아연질캡셀/A	3	30	70,200
	세명병원	내과	20090901	클리아티린연질캡셀/A	3	14	40,908
	세명병원	내과	20090901	클리아티린연질캡셀/A	3	14	40,908
	세명병원	정형외과	20091005	클리아티린연질캡셀/A	3	14	40,908
	세명병원	정형외과	20091005	클리아티린연질캡셀/A	3	14	40,908
	경상병원	신경과	20091017	그리아연질캡셀/A	3	24	56,160
	세명병원	내과	20091103	클리아티린연질캡셀/A	3	14	40,908
	세명병원	내과	20091103	클리아티린연질캡셀/A	3	14	40,908
	경상병원	신경과	20091121	그리아연질캡셀/A	3	30	70,200
	세명병원	신경과	20091201	클리아티린연질캡셀/A	3	14	40,908
	세명병원	신경과	20091201	클리아티린연질캡셀/A	3	14	40,908
	경상병원	신경과	20091222	그리아연질캡셀/A	3	30	70,200
	총계				684		1,804,365

꿈적않는 의무고용 실태, 핑계만 대는 보훈처

1. 현황

□ 취업지원의 목적과 방법

-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8조 규정에 근거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 지원을 하고 있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8조(취업지원)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해 취업지원을 한다.

- 취업지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유공자에 대해 우선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돕고 자긍심을 고취함.
→ 사회 복지적 기능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통합을 이룸.

- 취업지원 방법에는 가점취업, 국가기관 등에 대한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 공기업·사기업체에 대한 보훈특별고용이 있음.

<취업지원 방법>

국가기관·지자체 국·공립학교 공무원	· 채용시험 가점 5~10% · 기능직 공무원(기능군무원 포함) 정원의 10% 특별채용
공기업 및 민간기업	· 채용시험 가점 5~10% · 전체 종업원 3~8%(공기업 +1%) 보훈특별고용
사립학교 교직원	· 채용시험 가점 5~10% · 교직원 정원(교원제외)의 10% 보훈특별고용

□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현황

<국가유공자 의무고용관련 보도 내용>

- 국가유공자·자녀 의무고용제 유명무실 (연합뉴스, 1992-06-29)
- 국가기관이 유공자 의무고용 안 지켜 (연합뉴스, 1999-10-01)
- 군인·유공자 의무고용, 기업 안 지켜 유명무실 (매일경제 2002-12-15)
- 보훈대상자 취업 찬밥신세 (문화일보 2003-04-14)
- 삼성, 유공자 의무고용 50대기업 중 꼴찌 (오마이뉴스 2008-10-02)
- 삼성·LG그룹, 국가유공자 채용률 저조 (파이낸셜뉴스 2009-10-19)

- 1992년부터 언론에서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도 관련 반복해서 문제제기, 국회도 국정감사에서 “의무고용을 제고를 위해 노력하라”고 지적한 바 있으나 현황을 보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실정임.

- 국가기관: 법정인원 12,232명 중 6,740명이 취업 (취업률 55.1%)
- 공공기관·공기업: 법정인원 31,146명 중 27,773명이 취업 (취업률 87.5%)
- 일반기업체: 법정인원 124,261명 중 45,171명이 취업 (취업률 36.3%)

<기관·업체별 의무고용 채용 현황>

(2010. 6. 현재)

		국가기관	공공기관 · 공기업	일반기업체	계
기관·업체수		1,219	1,886	14,505	17,610
총종업원수		125,689	484,029	3,025,712	3,635,430
법정인원		12,232	31,146	124,261	167,639
취업인원	계	28,880	27,773	45,171	101,324
	법정 취업률(%)	6,740 (55.1%)	27,273 (87.5%)	45,171 (36.3%)	79,184 (47.2%)
	일반직	22,140	-	-	22,140

※ 국가기관의 법정취업인원 6,740명은 기능직 채용을 의미 (일반직은 가산점제도를 통해 공개채용되고 있음)

(1). 국가기관부터 안 지키는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 중앙행정기관 기능직 채용 현황을 보면 법정인원 4,491명 중 2,047명이 취업하여 45.6%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음.
→ 취업률은 50%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임.
- 중앙행정기관 49개 중 법정취업률에 못 미치는 기관은 34개로 나타남.
→ 국무총리실 85.7%, 공정거래위원회 33.3%, 금융위원회 0%, 국민권익위원회 85.7% 등 정부위원회 주요기관의 법정취업률 미달.
→ 대통령실 46.2%, 대검찰청 46.3%, 감사원 28.6% 등 주요기관의 법정취업률 미달.

<중앙행정기관 및 국가기관 기능직채용 현황>

(2010. 5. 31. 현재)

구 분	총인원	법정인원	법정취업	취업률
감사원	140	14	4	28.6
법제처	18	1	1	100
국가보훈처	285	31	57	183.9
공정거래위원회	34	3	1	33.3
통일부	166	15	8	53.3
외교통상부	215	21	18	85.7
법무부	1,264	114	143	125.4
국방부	4,426	423	315	74.5
환경부	214	18	21	116.7
노동부	127	17	10	58.8
국세청	1,545	146	64	43.8
관세청	577	59	82	139
조달청	132	13	8	61.5
통계청	208	18	12	66.7
대검찰청	2,017	190	88	46.3
병무청	263	22	25	113.6

경찰청	2,835	273	116	42.5
기상청	178	16	23	143.8
농촌진흥청	328	30	25	83.3
산림청	346	31	28	90.3
중소기업청	83	11	8	72.7
특허청	93	9	6	66.7
식품의약품안전청	156	15	15	100
해양경찰청	353	33	37	112.1
문화재청	256	23	39	169.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1	1	0	0
국가인권위원회	21	2	3	150
소방방재청	39	3	9	3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5	1	1	100
대통령실	268	26	12	46.2
행정안전부	602	57	48	84.2
금융위원회	14	1	0	0
여성가족부	11	1	2	200
기획재정부	91	9	5	55.6
지식경제부	21,258	2,120	443	20.9
문화체육관광부	618	55	47	85.5
보건복지부	889	87	46	52.9
교육과학기술부	185	17	21	123.5
국토해양부	1,547	147	110	74.8
농림수산식품부	1,023	95	76	80
국민권익위원회	40	4	3	75
국무총리실	75	7	6	85.7
국회사무처	351	35	9	25.7
국회도서관	63	6	2	33.3
대법원	164	16	5	31.3
고등법원	272	25	3	12
지방법원	1,942	187	27	14.4
헌법재판소	70	7	3	4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08	36	10	27.8
49개 국가기관	46,236	4,491	2,047	45.6%

○ 국가기관이 의무고용율이 미달되어도 과태료 부과와 같은 별도의 강제수단이 없음.

→ 국가기관이 보훈처로부터 추천받은 취업대상자를 채용하지 않기 위해 ‘적격자 없음’으로 통보하여도 별도의 과태료 부과 등 강제할 수단은 없음.

☞ (질의요지)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기관부터 국가유공자 채용에 인색함. 의무고용율이 미비하여도 사실상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국가기관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할 것.

(2) 일반기업체 의무고용을 낮아

○ 시가총액 기준 10대 업체의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 삼성전자는 법정인원 3,283명 중 934명이 취업하여 법정취업률 **28.5%** (10대 업체 중 가장 저조함)
→ LG전자는 법정인원 1,313명 중 399명 취업하여 법정취업률 **30.4%** (10대 업체 중 두 번째로 저조함)

※ 두 업체의 법정취업률은 10대 업체 법정취업률 평균인 **53%**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남.

<시가총액 기준 10대 업체의 의무고용 현황>

(2010.06.30 현재)

	업체명	총직원수	법정인원	현 취업인원	취업률(%)
1	삼성전자	82,182	3,283	934	28.5
2	포스코	16,008	959	748	78
3	현대차	55,563	2,241	1,800	80.3
4	현대모비스	5,650	288	92	32
5	현대중공업	21,561	862	699	81.1
6	LG화학	7,718	448	241	53.8
7	한국전력공사	20,016	1,801	1,564	86
8	LG전자	31,416	1,313	399	30.4
9	(주)LG	85	2	0	0
10	기아차	31,551	1,264	865	68.4
					평균 53%

※ 한국거래소 상장공시 시스템: 시가총액 상위 10대 업체

※ (주)LG는 LG그룹의 지주회사임

○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국가유공자 채용현황을 보면
 → 삼성전자의 법정인원은 3,293명인데 취업인원은 934명으로 2,349명이 미고용됨.
 미고용된 인원 2,349명에 비해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 채용은 466명에 그치고 있음.

→ LG전자는 법정인원이 1,313명인데 취업인원은 399명으로 914명이 미고용됨.
 미고용된 인원 914명에 비해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 채용은 82명에 그치고 있음.

<최근 5년간 삼성전자, LG전자의 국가유공자 채용 현황>

(단위: 명)

	2006	2007	2008	2009	2010.9	계
삼성전자	161	69	72	97	67	466
LG전자	10	11	10	13	38	82

※ 국회와 언론의 끊임없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을 제고를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음.
 ※ 의무고용율을 준수하지 않아도 제재규정이 없음.

<참고-2009년 삼성전자, LG전자 장애인의무고용 현황>

(단위: 명)

	상시근로자	법정인원	취업인원	부담금납부액
삼성전자	84,339	1,686	592	68억 6,600만원
LG전자	29,813	596	294	16억 5,700만원

- 일반기업체는 장애인의 2~3% 법정인원을 의무고용
 - 부족인원에 대해 1인당 매월 530,000원씩 납부함

☞ (질의요지) 삼성전자, LG전자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고용율이 상당히 저조하게 나오고 있음. 국가유공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도록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 기업이 국가유공자의 의무고용을 기업부담요인이나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곤란함.

다른 기업보다 의무고용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까지 의무고용율을 제고를 위한 노력은 무엇인지 밝혀 달라.

(3) 구인구직 연결 미흡

○ 보훈처는 일반기업체(대기업)의 의무고용을 저조한 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 취업신청자가 대기업 사무직종에만 채용되기를 고집함.
- 사무직을 희망하는 취업신청자의 요건과 기업의 요구조건이 맞지 않아 적격자 선정이 이루어 지지 않음.
- 대기업이라도 지방에 소재한 생산직 등 기피직종은 취업희망자가 없어 취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음.

먼저, 취업신청자의 학력에 따른 희망직종을 보면

※ 전체 취업신청자 중 6,024명(48%)은 기술직을 희망하고 있어 취업신청자가 사무직만 고집하여 취업지원의 어려움이 있다는 보훈처의 의견은 곤란함.

〈취업신청자의 학력에 따른 희망 직종〉

(기준:2010.8.31.현재)

구 분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이상	합계
사 무	378	658	2,027	159	3,222
기 술	1,782	1,873	2,265	104	6,024
영 업	64	84	149	4	301
서비스업	96	68	71	6	241
노 무	206	19	20	1	246
경 비	577	37	70	8	692
기 타	76	45	92	6	219
합 계	3,882	3,318	4,836	289	12,325

- 실제로 삼성전자, LG전자에도 기술, 생산직 등에 834명(61%)이 취업하고 있음.
→ 취업신청자가 무조건 대기업 사무직 취업만 고집하고 있어 취업지원이 어렵다는 보훈처의 의견은 부당함.

〈삼성전자, LG전자에 취업중인 국가유공자의 업종별 현황〉

(기준:2010.9.30현재)

	사무	기술	생산	영업	경비	노무	계
삼성전자	359	411	173	7	0	0	949
LG전자	141	94	156	6	1	1	399
합계	500	505	329	13	1	1	1,348
		834 (61%)					

두 번째, 취업신청자의 취업 희망지역을 보면

- 전체 취업신청자 중 6186명(50%)이 서울이외의 지역도 취업 희망지역으로 신청하고 있음. 취업신청자가 서울·경기지역의 취업만 고집하고 있어 취업지원이 어렵다는 판단은 곤란함.
→ 영남 2,851명(23%), 호남 1,475명(11%)
→ 특히, 전국을 희망한다는 취업신청자도 100명에 달하고 있음.

〈취업신청자의 취업 희망지역〉

(기준:2010.8.31.현재)

구분	서울·경기	강원	충청	영남	호남	제주	전국	합계
인원	6,139	342	1,310	2,851	1,475	108	100	12,325
	6,186 (50%)							

- ☞ (질의요지) 한명이라도 더 좋은 일자리를 연결해 주어야 하는 보훈처는 취업신청자의 사무직 요구고집, 지방직 기피 등 문제의 원인을 취업신청자에게 돌리고 있음.
보훈처는 취업신청자의 희망직종 및 희망지역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인·구직별 적합한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임.

(4) 직업훈련 후 취업연계 부족

보훈처의 취업교육 훈련 후 취업률을 보면

- 공공직업훈련기관 수료인원의 연간 평균 취업률은 30.4%
→ 사설학원의 수료인원의 연간 평균 취업률은 5.2%
→ 2009년 수강료 지원 및 교육훈련장려금으로 10억 5,200만원 집행

반면, 장애인고용공단 취업교육 훈련 후 취업률을 보면

- 공공직업훈련기관 수료인원의 연간 평균 취업률은 49.9%
→ 사설학원의 수료인원의 연간 평균 취업률은 35.4%

(장애인고용공단 답변자료 2010.9.)

- 동일한 공공직업 훈련기관과 사설학원에서 취업교육 훈련을 받고서도 취업률에서 차이가 나고 있음. 취업교육 후 보훈처에서 취업알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

- 또한, 보훈처는 『2009년 신규취업자 및 교육훈련이수자에 대한 만족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교육훈련이수 후 훈련이수자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지원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힌바 있음.

→ 그러나 2010년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취업률은 9%, 사설학원의 취업률은 4.5%로 오히려 2009년도 보다 떨어졌음

〈취업교육 훈련 후 취업률〉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6월
공공직업 훈련기관	훈련기관수	71	71	71	67	63
	훈련인원	445	433	389	430	287
	수료인원	343	313	291	294	43
	취업자수	126	124	97	96	4
	취업률(%)	37	40	33	33	9
사설학원 (취업수강료 지정학원)	교육기관수	-	216	317	324	314
	신청인원	-	5,707	5,824	5,657	3,802
	지급인원	-	3,460	4,962	5,448	2,418
	취업자수	-	-	287	301	110
	취업률(%)	-	-	5.8	5.5	4.5

- ☞ (질의요지) 취업신청자는 취업교육훈련 수료 후 좋은 곳으로 취업이 될 것을 기대하지만 실제 취업률은 낮게 나타나고 있음. 보훈처는 취업교육훈련을 통해 실제 취업과 연계하여 취업 알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마무리) 취업지원의 핵심은 단순 의무고용율의 확보나 과태료 부과 등 규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국가유공자의 고용이 잘 수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확보하는 데 있음.

〈2010년 국정감사 국가보훈처 질의서-1〉

책임 떠넘겨 방치되고 있는 현충시설

1. 국민보훈의식지수 64점, 현충시설 방문 35.6점

- 2009년도 보훈처에서 조사한 국민보훈의식지수를 보면 전체 보훈의식점수는 64점이나 세부사항 중 현충시설 방문 점수는 35.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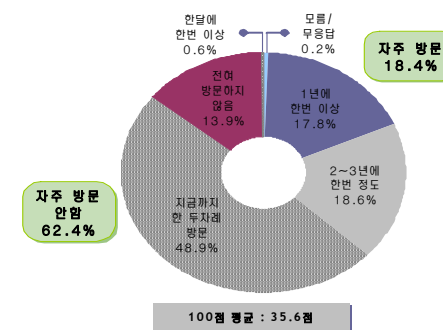
→ 현충시설 방문 점수는 매년 30점대로 낮은 점수를 기록함.

〈국민보훈의식지수 중 현충시설 방문 점수〉

구분	현충시설 방문 빈도					2009년 보훈의식지수
년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점수	36.0	34.2	32.0	33.5	35.6	64

자료:2009년 국민보훈의식지수

〈그림. 현충시설 방문 빈도〉



- 2009 국민보훈의식지수 결과에 따르면 국민 중 62.4%가 현충시설을 자주 방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보훈처는 현충시설에 대한 지정 뿐 아니라 국민이 찾아가고 싶은 시설로 만드는 것도 중요함.

○ 현충시설은 계속 증가 추세임.

('06년 1,507 → '07년 1,546 → '08년 1,555 → '09년 1,616)

○ 현충시설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예산도 있으나 현장 조사를 해본 결과 제대로 개보수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왜 관리가 부실한가를 점검해본 결과, 현충시설 지정과 관리주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2. 보훈처는 현충시설 지정만 하고 관리는 방치

○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4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현충시설을 지정하고 있음. 이와 함께 대통령령인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2조 규정에 근거하여 현충시설에 대한 개보수 및 건립을 지원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현충시설의 지정)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 및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각종 건축물·조형물·사적지나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 등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함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현충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의 업무) ① 국가보훈처장은 현충시설이 국가유공자와 이들의 공훈 및 희생정신을 기르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현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2. 현충시설의 지정·해제 및 그 관리자의 지정·변경

3. 현충시설의 관리비용 보조 및 건립지원

4. 현충시설과 관련한 기념행사의 개최 등 그 활용방안의 강구

○ 현재 보훈처가 지정한 현충시설은 독립운동 관련 721개소와 국가수호 관련 940개소로 총 1,661개소이며 관리주체는 지자체, 군부대, 기념사업회, 학교, 문중대표 등에서 하고 있음.

<관리주체별 현충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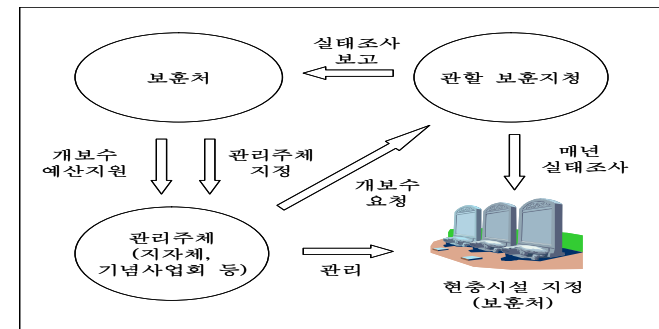
구분	지자체	군부대	기념사업회	학교	문중대표	기타	계
독립운동	376	1	79	55	143	67	721
국가수호	581	71	213	42	1	32	940
계	957	72	292	97	144	99	1,661

※기타: 마을회, 일반사회단체

○ 현충시설 관리는 현충시설 관리주체가 직접 하도록 되어 있음.

- 보훈처는 현충시설 및 관리주체에 대한 지정만 관여.
- 개·보수는 필요 시 관리주체가 해당 지청을 경유하여 보훈처에 예산지원을 요청하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현충시설 관리 방식>



※ 보훈처는 현충시설 및 시설 관리자에 대한 지정 그리고 필요 시 개보수 및 건립지원만 하고 있을 뿐 직접관리는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임.

3. 문제점 및 현장조사 결과

① 도대체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현충시설에 대한 건립은 개인, 기념사업회, 건립위원회 등에서 하고 있으나 관리자 지정은 현충시설의 소재지에 따라 관할 지자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지정이 되고 있음.

<p>〈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p> <p>제2조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의 업무) ① 국가보훈처장은 현충시설이 국가유공자와 이들의 공훈 및 희생정신을 기리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p> <p>1. <u>현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u></p> <p>2. <u>현충시설의 지정·해제 및 그 관리자의 지정·변경</u></p> <p>3. <u>현충시설의 관리비용 보조 및 건립지원</u></p> <p>4. 현충시설과 관련한 기념행사의 개최 등 그 활용방안의 강구</p>	
--	--

〈현충시설 건립주체 및 관리자의 사례〉

시설명	위치	건립주체	관리자
유관순 열사상	서울시 광진구 능동 18 (어린이대공원 내)	이승석(개인)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
조만식 선생 동상	서울시 광진구 능동 18 (어린이대공원 내)	조만식선생 기념사업회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
송진우 선생 동상	서울시 광진구 능동 18 (어린이대공원 내)	송진우선생 동상건립위원회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

- 건립주체, 관리자 그리고 보훈처 간 현충시설 관리에 대한 역할이 불명확하여 서로 책임을 이양하고 있음.
- 건립주체에 기타사유¹⁾가 발생하면 관리와 관련된 협의는 더욱

1) 기타 사유: 기념사업회의 존재여부 불투명, 기념사업회 내부갈등, 개인 건립주체의 신상변동 등

어렵게 됨.(현충시설이 거의 방치되고 있다는 의미)

〈현충시설 건립주체, 관리자, 보훈처의 입장 사례〉

건립주체의 입장 (조만식 기념사업회)	관리자의 입장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	보훈처의 입장 (보훈처 서면답변)
기념사업회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으나 매일 현충시설 등을 찾기 어려운 상황임. 특별한 개보수 필요 시 국가보훈처에 직접 요구할 것임. (2010.9.29 조만식 기념사업회 유선 답변)	건립주체와 협의하여 보수할 위한 조치가 필요하나 사실상, 건립 후 건립주체 해체 또는 관리능력 부족 등으로 사후 관리가 곤란한 실정임. (2010.9.30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 서면답변)	현충시설은 관리자가 직접 관리, 국가보훈처는 개보수·안내관 설치·활성화 지원 등 실시함. (2010.9.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요구자료 서면답변)

자료: 조만식 기념사업회, 어린이대공원 관리사업소, 국가보훈처 답변자료

② 하나마나한 현충시설 실태조사

- 보훈(지)청장은 현충시설 관리지침 제 13조에 따라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음.

<p>〈현충시설 관리지침-국가보훈처 훈령 제789호〉</p> <p>제13조 (개보수대상 시설 선정) ①보훈(지)청장은 관할구역 내의 현충시설에 대하여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u>개보수지원검토 현충시설로 선정</u>하여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 보훈처의 〈현충시설 실태조사 계획〉에 따르면 ‘자체계획 수립을 통해 현장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함.²⁾ 현충시설의 현장방문 실태조사보다 인터넷 등을 통한 자료조사의 비율이 더 높음. 이는 ‘현충시설 관리지침’ 상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이유 중 개보수가 필요한 곳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인데 자료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지난 5년간(2006~2010년) 현장방문 건수는 1,413건인데 반해 자료조사 건수는 1,847건에 이름.

2) <2007년 현충시설 실태조사 계획> 국가보훈처, 현충시설과, 2쪽, 2007.2

〈현충시설 실태조사 계획 및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년도	현충 시설	구분	계획	실적	개보수 필요시설	실제 개보수 지원된 시설
2006	1,507	방문조사	1,507	37	40	20
		자료조사		447		
		계	1,507	484	40	20
2007	1,546	방문조사	1,546	258	-	-
		자료조사		480	-	-
		계	1,546	738	-	-
2008	1,595	방문조사	386	406	18	7
		자료조사	466	475		
		계	852	881	18	7
2009	1,616	방문조사	287	276	6	2
		자료조사	475	445		
		계	762	721	6	2
2010	1,661	방문조사	434	436	7	4
		자료조사	-	-		
		계	434	436	7	4
총 방문조사 1,413건 자료조사 1,847건			총계		71	33

- 최근 5년간 보훈처 실태조사결과 개보수 필요 대상으로 지정된 시설은 71건이나 실제적으로 개보수 된 건은 33건에 불과함. 나머지는 아직도 방치되고 있음.

→ 보훈처는 실태조사 후 관리를 부실하게 한 현충시설 관리자에 대해 시설 개보수를 요청하였으나 개보수를 하지 않아도 제재조치를 할 수 없음.(규정 미비)

→ 보훈처는 실태조사를 통해 개보수 필요시설을 파악한 이후에도 관리주체의 요청이 없으면 지원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 즉, 보훈처는 실태조사 후 개보수 필요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 통보만 할 뿐 관리주체가 개보수에 대한 의지가 없을 시는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실태조사는 단순 실태조사에 불과하며 개보수 등 관리가 필

요한 현충시설이 발견되어도 보훈처의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미비한 상황임. 현행 규정상 보훈처가 현충시설 지정을 하게 되어 있고 관리자 지정·변경도 보훈처가 하게 되어 있음. 관리자가 시설 관리를 부실하게 할 경우, 관리자 지정을 취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하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③ 현충시설 및 사적지 현장조사

○ 서울시 광진갑 지역 내의 현충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현충시설 관리 상태를 현장 조사함.

〈현충시설 및 사적지 조사개요〉

- 조사 일시: '10년 9월 26일
- 조사 목적: 현충시설 및 사적지 관리실태 파악
- 조사 대상: 서울시내 독립운동 관련 현충시설 및 사적지 12개소
- 조사 내용: 현충시설 상태 파악, 현장사진, 현장 의견청취

○ 의원실 현장 조사결과 2010년 6월 보훈처에서 실시한 현충시설 실태조사결과 ‘상태양호’로 보고되었으나, 우리 의원실에서 2010년 9월 직접 방문해보니 관리 상태가 ‘상태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음.

→ 현충시설의 훼손상태로 보아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보임.

→ 보훈처 조사결과 **상태양호**인 시설의 관리수준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전국의 다른 상태양호로 보고된 현충시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지 심히 우려스러움.

<2010년 현충시설 방문조사 세부내역 >

시설명	소재지	보훈처 (2010.6월)	의원실 (2010.9월)	비고
유관순 열사상	서울 광진구 능동 18(어린이대공원 내)	상태양호	상태불량	· 동상 한쪽이 파손, 후면에는 상당부분 금이 간 상태
고하 송진우 선생 동상	서울 광진구 능동 18(어린이대공원 내)	상태양호	상태불량	· 동상이 전반적으로 부식되어 이끼가 끼어있음. 받침대에는 낙서가 되어 있음.
고당 조만식 선생 동상	서울 광진구 능동 18(어린이대공원 내)	상태양호	상태불량	· 동상이 전반적으로 부식되어 이끼가 끼어있음. 받침대에는 낙서가 되어 있음.

[현충시설 현장조사 사진 첨부]

<유관순 열사상 현장조사 사진>



깨어진 태극기 우측 상단



금이 가고 깨어진 동상 뒷면



금이 가고 깨어진 동상의 손부분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 표시



거미줄과 먼지진 동상 얼굴부분



글씨가 보이지 않고 금이 간 후면

- 위치: 서울시 광진구 능동 18(어린이대공원 내)
- 건립주체: '73년 10월, 이승석(개인)
- 관리자: 어린이대공원 관리사업소

<고하 송진우 선생 동상 현장조사 사진>



· 주변 환경이 정리되지 않아 전면에서
동상이 보이지 않음



· 명패에 낙서가 되어있음



동상 뒷면
· 많은 낙서들로 얼룩져 있음



얼굴, 가슴 전체적으로 부식이 되고
이끼가 끼어 있음

- 위치: 서울시 광진구 능동 18(어린이대공원 내)
- 건립주체: 1983년 9월, 송진우선생 동상 건립위원회
- 관리자: 어린이대공원 관리사업소
- 주요공적사항: 중앙중학교의 교장으로서 민족의식을 불어넣음. 동아일보사가 주석회사로 개편되자 사장에 취임 30여년 간 《동아일보》를 민족의 대변지로 이끔

<고당 조만식 선생 동상 현장조사 사진>



- 위치: 서울시 광진구 능동 18(어린이대공원 내)
- 건립자: 1976년 12월, 조만식선생 기념사업회
- 관리자: 어린이대공원 관리사업소

④ 관리지침조차 없는 사적지

<참고: 현충시설과 사적지 구분의 차이>

현충시설: 독립운동, 국가수호와 관련된 탑, 비석, 동상, 조형물 등을 의미

사적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시설의 자취가 남아 있는 곳

※ 서울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조사는 2008년에 마무리 발간되었으나 조사 후 2년간 별 다른 대책 없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함.

- 사적지 조사 및 관리는 현충시설 관리의 한 부분으로 현충시설 관리 예산을 사용하고 있음.
- 보존처는 독립유공자 생가 터, 전투지 등 장소적 개념의 사적지의 보존·관리를 위해 2007년부터 사적지 실태조사를 시작함. (당시 언론 및 국회에서 사적지 관리에 대한 지적을 받음)

<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발간현황>

년도	책명	발간일	조사기관
2008	서울 독립운동사적지	2008. 8. 15	중앙대 중앙사학연구소
2009	경기남부 독립운동사적지	2009. 2. 27	경기도향토사연구협의회
	인천·경기북부 독립운동사적지	2009. 7. 31	“
	충청북도 독립운동사적지	2009. 9. 15	충북대 증원문화연구소
	대전·충남 독립운동사적지	2009. 9. 2	충남대 충청문화연구소
	서울·경기 국가수호사적지	2009. 8. 15	중앙대 중앙사학연구소
2010	강원도 독립운동사적지	2010. 2. 27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전라북도 독립운동사적지	2010. 8. 10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광주·전남 독립운동사적지	2010. 9. 10	전남대 산학협력단
	대구·경북 독립운동사적지	2010. 8. 15	(사)안동독립운동기념사업회
	부산·울산·경남 독립운동사적지	2010. 6. 5	동아대 석당학술원
	제주도 독립운동사적지	2010. 2. 28	제주대 박물관
	강원·충청 국가수호사적지	2010. 1. 31	한국군사학회
	경남·경북 국가수호사적지	2010. 5. 31	“
	전라·제주 국가수호사적지	2010. 6. 10	“

→ 서울독립운동사적지 조사결과 멸실 75%(149곳), 완전변형 7%(13곳), 부분변형 18%(37곳)으로 나타남.

〈여운형 집 현장조사 사진〉

- (보훈처) 조사된 서울 독립운동 사적지 중에서 멸실로 분류된 곳은 방문하여 현장을 조사한 결과 아무런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아 사실상 보존 및 관리가 어려움을 확인함.
- 다만, 부분적으로 원형이 보존·변형되어있는 곳은 별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방문하여 현장을 조사함.

가. 여운형 집

- 위치: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8
- 지붕: 임시방편으로 비닐을 덮어놓은 후 당시의 것으로 보이는 깨진 기왓장으로 고정해 놓았음.
- 건물 후면: 썩은 폐목과 철조망 등이 어지럽게 쌓여있어 흉물스럽게 보임.
- 안동칼국수 집은 영업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건물이 전반적으로 낡고 음습해 보임.

〈서울독립운동 사적지 조사결과〉



구분	멸실	완전변형	부분변형	합계
한말구국운동	21	4	9	34
일제침략	15	2	7	24
일제하독립운동	79	6	20	105
독립운동가	34	1	1	36
합계	149 (75%)	13 (7%)	37 (18%)	199 (100%)

※자료:국가보훈처 답변자료

〈2010년 사적지 방문조사 세부내역〉

	보훈처 의견	의원실 의견
여운형 집	· 해방 전후 건국동맹과 건국준비위원회의 거점으로서 역사의 의미가 클 뿐 아니라 당시의 건물 또한 일부 남아 있어 별도의 보존 대책이 필요하다.	· 당시 실태조사보고서에 실린 사진보다 훼손상태가 진행됨. 건물 뒤편에는 임시로 비닐을 사용 지붕을 덮어 놓는 등 관리가 되어있지 않았음.
진단학회	· 일제하 한국학 연구의 거점으로서 역사적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당시의 모습 또한 남아 있으므로 기념표석 설치와 더불어 별도의 보존 대책이 요청됨.	· 진단학회 사무소로 사용되었던 이병도의 집은 그대로 보존이 되어있으나 사적지 주변에 폐휴지 및 쓰레기가 쌓여있었으며 역사적 장소에 대한 별도의 표시가 없었음.

※구체적인 사진자료는 첨부

2008년 보존처 조사	2010년 의원실 조사
	
전면	전면
	
	후면 지붕
	
	우측 후면

〈옛 진단학회 사무소 현장조사 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서울시 종로구 계동 98 - 2008년 보존처 조사 의견: 일제하 한국학 연구의 거점으로서 역사적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당시의 모습 또한 남아 있으므로 기념표석 설치와 더불어 별도의 보존 대책이 요청됨. - 2010년 의원실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존상태 : 진단학회 사무소로 사용되었던 이병도의 집은 그대로 보존이 되어있으나 주변에 폐휴지 및 쓰레기가 쌓여있었으며 역사적 장소에 대한 별도의 표시가 없었음. · 표지석: 재동초등학교 앞에 잘못 설치된 표지석의 위치는 아직 변동 없음. 재동초등학교 앞은 주차장으로 변해 표지석 조차 보이지 않음. → 표지석은 서울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음 → 보존처는 잘못된 위치에 설치된 표지석에 대해 위치수정 요청 등 서울시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 사항없음.
--

2008년 보존처 조사	2010년 의원실 조사
	
전면	전면
	
잘못 설치된 표지석	잘못 설치된 표지석

〈3·1독립운동 기념터 현장조사 사진〉

- 위치: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84
- 의원실 조사결과
 - 멸실된 사적지로 원형 모습을 찾기 힘들
 - 주변에 쓰레기 더미가 함께 놓여 있었으며 표석 주변으로 오물이 흐른 흔적 등이 남아있었음.



→ 2010년은 경술국치 100년인 뜻 깊은 해임. 보훈처 내에서도 별도의 보존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적지에 대해 긴급한 조치 없이 방치한 것은 문제의식의 부족이라 판단됨. 보훈처는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추가적인 훼손을 막아야 함.

☞ (질의요지) 2010년 의원실 현장조사 결과 2008년 보훈처의 서울지역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 당시 보다 추가적인 훼손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음을 확인함.

보훈처는 조사만 하고 관리를 위한 별도의 조치가 없었음. 현재도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결과적으로 원형이 남아있는 사적지에 대해 추가적인 훼손상태를 진행시키고 있음. 사적지 보존·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과 대책을 마련해야함.

⑤ 목표에 못 미치는 현충시설 관리 실적

- 최근 5년간 현충시설 개보수 예산 및 지원액 현황을 살펴보면 보훈처는 책정된 예산액 보다 실제 지출액이 매년 목표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매년 사용되지 못한 예산은 불용액의 사유가 되고 있음.
- 현충시설, 사적지 등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데 관련 예산은 사용되지 않고 불용처리 되고 있음.

〈최근 5년간 현충시설 개보수 예산 및 실제 지원액〉

(단위: 천원)

구분 \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예산액(A)	575,000	913,000	1,051,000	1,205,000	1,300,000	4,881,000
지출액(B)	525,000	800,000	1,050,737	1,160,025	1,289,879	4,825,641
불용액(A-B)	50,000	113,000	263	44,975	10,121	55,359

※자료:국가보훈처 답변자료

☞ (질의요지) 보훈처는 현충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곳이 있고, 예산도 있으나 적절하게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음. 보훈처는 현충시설 관리주체에게 맡겨만 놓고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지 않으면 개보수도 예산 집행도 안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음. 적극적으로 현충시설 관리를 위한 시스템 점검이 필요함.